

독일통일과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2010년 3월 8일 서울 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

크리스티안 헤게머(Christian Hegemer)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 국제협력원장

I. 들어가는 말

존경하는 박 명규 소장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연구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중요한 주제인 통일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해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곳 통일평화연구소는 통일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스 자이델 재단의 고유한 주요수행과제들 중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의 경험에 관해 말씀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저희 재단과 통일평화연구소가 그 동안 통일분야에서 협력해 오며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은 한국과 비교하여 통일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 및 민주시민교육 측면에서 준비가 훨씬 덜 된 상태였습니다. 냉전체제에서 사회주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이 안고 있는 취약점에 관한 연구는 예를 들어 칼 포퍼(사회 분야)나 노벨상 수상자였던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하이에크(경제 분야)에 의해서 수행된 적이 있었지만, 냉전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사회주의 모델의 붕괴를 대비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간파하지는 못한 듯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0년 전인 1990년 3월에 동독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인민의회 자유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서독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속한 통일을 열망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18일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 전문가들은 동독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예상에 따르면,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와 유사하게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탄탄한 연구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동시에, 역사는 우리가 준비한 청사진이나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의 변화에 대해 우리는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1년 전인 1989년 11월 9일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인해 동독의 사회주의 국가체제가 하루 아침에 무너졌으며, 또한 유럽의 전후 질서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된 기쁨과 조직적인 탄압을 일삼던 무소불위의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환희가 모든 불안과 의심을 압도하였습니다. 11월 9일에 이르는 시간들을 살펴보면 마치 한 편의 장편 서사극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프라하,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주재 서독 대사관으로의 대규모 난입사태가 발생했으며, 동 베를린 주재 서독 상설 대표부는 1989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던 동독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명백하게 감지하고 대응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1989년 가을부터 승리를 이끌어 내기 시작하였는데, 무엇보다도 10월 7일 라이프치히 시에 모인 70,000명의 군중들이, 1953년 동독에서, 1956년 헝가리에서, 그리고 1968년 프라하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위대를 향해 소련군이 탱크를 앞세워 진압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를 벌였던 시점이 가장 큰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인파가 베를린 장벽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던 장면은 무엇보다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장벽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 베를린을 탈출하다 목숨을 잃었으며, 바로 이 장벽이 동과 서를 갈랐고, 바로 이 장벽의 뒤편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자신들이 억압하던 주민들에게 잘못된 권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철벽 같은 담장이 그렇게

다행히도 평화롭게 무너지자 그에 따른 결과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권력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으며, 마치 도미노와 같이 붕괴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기록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라이프치히 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는 지 불과 1년 후인 1990년 10월 3일에 독일통일이 이루어 졌는데, 이 때는 이미 기쁨의 절정기가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이 때부터는 한국의 언론에 여러 차례 비춰진 모습과 같이 많은 어려움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요?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상황을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현재 독일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II. 독일통일의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동독은 실질적으로 전체 법률체도를 이양 받음으로써 매우 빠르고 어려움 없이 서독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새로운 제도들을 스스로 만들어 내야만 했으며, 그러한 작업 또한 더디게 진행되기 일쑤였던, 러시아를 포함한 중동부 유럽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수되었다'는 느낌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신 처음부터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법적 안정성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법률 및 행정 부문에 있어서 광범위한 인력지원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정성이 갖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투자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요소는 큰 장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국내정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외견상의 통합과정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1990년 3월에 실시되었던 최초의 자유선거 이후에 동독지역에서 민주주의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차이는 명백하게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독의 민주주의 모델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구 서독지역에 비해 구 동독지역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좌익당(Die Linke, 좌익당은 민사당PDS의 후신이며, 민사당은 동독 공산당이었던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후신이었음)과 같은 극단적인 정치이념을 추구하는 야당은 구 서독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 연방주(구 동독지역)에서 훨씬 강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보수 자유주의 정당인 기민당(CDU)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연방 주들도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피로도의 경우에도 구 서독지역보다는 구 동독지역에서 명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구 동독지역 주민들이 독일 연방의 정당체제에 대해 더욱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외교측면에서 살펴볼 때에도 독일통일은 하나의 커다란 성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일통일은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인접국들의 동의 하에 평화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유럽연합 및 나토와의 확고한 연대를 통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구성원으로서의 독일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동시에 통일독일은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에는 통일은 우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임에 틀림이 없었으며, 따라서 독일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따라서 더욱 커진 독일이 필연적으로 더욱 강해지거나 더 공격적으로 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편이 타당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자연치유력을 통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동독시절의 피폐해진 잿빛 폐허 대신에 '번영하는 모습'을 만들겠다는 희망은 100% 옳은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통일 직후 2년 간인 1990년과 1991년에 있었던 경제전환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구 동독지역은 큰 폭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으나, 90년대 말부터 이러한 현상은 사라지고 서독지역과의 지속적인 차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동독지역의 국내총생산은 서독지역의 67%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생산성은 서독의 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 축적도는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1년에 서독의 40%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82% 수준까지 따라 올라왔으며, 동독의 기존시장이었던 동유럽 시장의 와해 직후인 1995년 수출현황은 서독지역의 40%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7년에는

70% 로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서독 지역의 균형발전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의 흐름이 2000 년부터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몇몇 지표상으로는 오히려 편차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동독지역에서의 성장이, 본질적으로 동독지역 내 전체 총생산의 최대 3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서독지역으로부터의 높은 지원금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1990 년에 서독수준의 62% 에 불과했던 가구당 순소득이 2007 년에는 80% 이상으로 상승하였지만, 서독지역이 동독지역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체제는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 이후 처음 10 년 간은 전체 독일 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기존의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도 시간이 지나면 신 연방주들(구 동독지역)이 서독지역의 수준에 근접하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그 이후 10 년 간은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및 변화와 관련하여 통증을 수반하는 논의와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III. 사회통합의 도전과제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일인들에게 어려운 통일과제는 사회적 통합입니다. 베씨(Wessi: 서독놈), 오씨(Ossi: 동독놈)와 같은 상호 간의 비속어를 통한 분리 내지는 갈등의 표현은 흔히 서독인들은 뭐든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듯 잘난 척 하며, 동독인들은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가의 도움만을 바라보며 불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구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40 대 후반에서 50 대 사이의 세대 중 일자리를 잃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교육을 받기는 했으나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독일통일의 희생양인 동시에 2 등 국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1990 년 이후의 논의과정에서 비판적 측면이 다소 완화되고 지난 10 년 간의 사회부문 개혁으로 인해 경제 및 노동시장 분야에서의 도전과제들이 명확해 지긴 했지만, 이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렌스바흐 연구소가 2009 년 9 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2009 년 9 월 26 일에 발행한 비르트샤프츠보헤 지 기사에 설문결과 게재), 질문을 받은 동독지역 주민들의 63%가 동서독 지역간에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느낀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머리 속의 장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심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내적인 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 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일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독일통일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상기 설문조사에 참가했던 응답자의 2/3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기쁜 일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인 전환은 흔히 외형상의 제도라고 불리는 법률이나 조직 등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 및 가치에도 해당되었습니다.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이러한 과정은 교육 및 일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었던 외형적인 제도상의 변화와 비교할 때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주의 하의 이성에 부합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공산주의적 인간(호모 소비에티쿠스)’으로부터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적 인간(호모 에코노미쿠스)’으로의 전환은 매우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이전까지 죄악시 되어왔던 이윤추구 또는 기업가 정신과 같은 가치들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돌연 중심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노동윤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배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외형상의 제도들이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내적인 제도들은 바뀌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는 흔히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대별되는 서독사람들과 동독사람들의 성향비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서독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뚜렷한 반면에 동독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약하며 순응적인 경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렇듯 내적인 제도상의 전환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가 남긴 사회심리적 유산과 새로운 사회체제에 따른 도전과제들은 ‘전환 스트레스’를 낳았습니다. 많은 구 동독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주했던 동독이라는 ‘틈새사회’가

기만과 착각에 빠져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슈타지(국가보위부)의 전체주의적인 감시체계는 가장 심각한 유산입니다. 전환 스트레스의 결과로 인해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병 또는 심리적 트라우마 등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조기정년을 하기에는 너무 젊고, 변화에 적응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통일의 패자(敗者)'라고 일컬어 지는 중간 세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이 단순한 세대간의 문제였다면 한 세대가 지난 후 생활여건과 사회적 규범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개 경제적인 비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하였습니다. 경제정책상의 측면에서 가족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이미 경제적인 곤궁과 비전의 부재가 정치적 극단화와 연계되는 위험한 경험을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IV.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발전과 조직

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은 배경에서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발전과 역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독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태동과 발전은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 및 나치 시대(1933-1945)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자들이 결여된 민주주의"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왕국이 붕괴된 후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민들이 주축이 된 민주적인 정당들은 소수에 그쳤던 반면, 극좌계열의 독일공산당(KPD)과 극우계열의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나치당: NSDAP)과 같은 극단적 성향의 집단들이 세력을 키워가던 중, 베르사이유 협약의 가혹한 조건들과 세계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독일사회는 193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결국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933년 국가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쟁취하자 미약하나마 존재하고 있었던 민주주의는 단일화된 국가 및 인종이념을 바탕으로 한 전체주의 감시국가로 대체되었으며, 히틀러는 독일을 전쟁으로 몰아갔습니다. 1945년 종전이 되고 독일이 전쟁의 폐허 속에 놓여 있을 때 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한 주체는 서방 전승국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그러한 의식을 심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전후 서독의 재건을 책임졌던 정당들 간에도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민주의식 및 정치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의 함양"(독일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해 독일정부가 독일의회에 제출한 1991년 12월 10일자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민주시민교육은 국가교육기관(특히 학교)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 지는 동시에, 학교 이외의 성인교육수단을 통해서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가지는 자유민주주의적 특징은 성인교육에 있어서 자율적인 참여 및 국가 및 시민조직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자유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높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지닌 단점이나 약점들을 경시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자유법치국가의 기본목적들을 생각해 볼 때 인권이나 자유, 단결 측면에서 그러한 점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디터 헤셀베르거 연방판사는 자신의 헌법주석에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한 편으로는 사회규범을 받아들이기 위한 교육의 책임을 수행하는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그러한 규범들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한 채 그것들을 검토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이기도 하다."

시민은 지식습득 및 비판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평가 및 가능성들에 대해 의식하는 방법을 체득해야만 합니다. 독재체제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존재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정치제도나 기관,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 동독시절에 청소년들에게 사회주의 인간상 형성을 위해 실시되었던 공민(公民)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연방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은 연방 내무부(연방 정치교육원)와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연방 청소년계획/여성정책 방안), 연방 교육연구부 및 한스 자이델 재단의 해외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타 재단들의 활동을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는 연방 경제협력부(개발원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럽사회기금과 같은 유럽차원의 기관들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원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위에 언급한 연방 정치교육원과는 별도로 완전히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갖춘 주(州)차원의 정치교육원이 있으며, 이 기관은 교육방안의 실천주체로서뿐만 아니라, 다른 주체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행정 및 교육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강력한 분권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치교육원의 주요과제로는 정치상황에 관한 이해증진, 민주주의 함양 및 정치참여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활동에 있어서는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입장을 견지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주관하는 “자율적인 주체들”은 민주적이며 다원화된 독일사회에서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에 속하는 기관들로는 교회, 노조, 공공단체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정 정당과 노선을 같이하는 “정치재단들”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치재단들은 정당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존재하지만 재단별로 특정 정당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적 여론형성과 관련된 정당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재단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며, 그 일환으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거나 학생, 성인, 여성 등과 같은 특정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연방의회에 진출해 있는 정당과 연관을 가진 정치재단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국가의 중요한 목표이지만, 그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철저히 분권적이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특정한 국가이념이나 특정정권을 돕는 잘못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민주시민교육행사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적인 휴가 이외의 추가적인 교육휴가형태로 승인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통일교육 및 자문을 위해 연방 독일문제연구소(BfgA: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을 설치하였는데, 본부는 본(Bonn)에 위치하였으며, 서 베를린에 분소를 두었습니다. 이 기관은 1969년 7월 1일 독일 연방정부의 발의에 따라 독일 내독성(BMG: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산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1969년 10월부터는 내독관계 연구를 전담하게 됩니다. 연방 독일문제연구소의 과제는 법률에 따라 정해 졌는데, 정보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내독성에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일반적인 정보제공자 역할과 지원 및 관리방안 촉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연구소는 자료 수집 및 보관, 연구와 민주시민교육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과제수행성과는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점과제를 들자면 베를린과 동독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독일문제연구소에서는 구 동독에 관한 기초자료들을 출간하였는데, ‘동독 안내서’ 또는 ‘동독 주요인물 인명사전’ 등이 그것입니다. 통일이 된 후인 1991년 12월 31일에 독일문제연구소는 해체되었습니다. 통일을 대비한 준비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은, 동독이 독일문제연구소를 주도면밀하게 관찰하였으며, 수 차례에 걸쳐 연구소를 해체시키려는 시도를 한 사실을 볼 때,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V. 독일의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 그리고 통일자문

1949년 이후 서독에서는 상술한 민주시민교육시스템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했던 반면에 동독에서는 사회주의이념에 의거한 단일한 방식의 교육만이 존재하였습니다. 동독의 교육은 맑스-레닌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주의적 감시체제에 따라 도처에 국가 보위부(슈타지) 요원들이 배치되어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이론은 발현할 수 없도록 감시하였던 터라 1990년에 통일이 되자 다음과 같은 커다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동독국민들은 1989년 10월부터 수 차례의 대규모 군중집회들을 통해 동독정권을 스스로 붕괴시켰지만, 새로운 체제에 관해 아는 바가 전무했고 구 동독시절에 가졌던 국가를 불신하는 태도가 통일 이후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도 지속되었습니다.
- “전환”과정에서의 많은 불안한 국면들 - 특히 급속한 노동시장의 악화 - 은 커다란 경제 불안으로 이어진 동시에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을 격감시켰습니다.
- 동독정권은 40년간 지속적인 선전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회주의 가치체계를 주입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에 갑작스럽게 동독이 붕괴되자 정신적인 공백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 더욱 심했는데, 성인들의 경우에는 동독정권이 행했던 선전의 허구성을 간파하고 있었던 반면에 학생들은 더욱 심하게 그러한 선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동독교사들도 일자리를 잃었으며, 그 결과 학교와 국가에 대한 권위가 급격하게 실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극우주의에 경도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독의 검증된 시스템이 동독에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가를 구성하는 하부구조의 일부이며, 이러한 형식의 인프라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비록 그 성과를 당장 느끼거나 측정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동반효과도 제공하게 됩니다. 학교부문에서의 이러한 작업은 상대적으로 수월했습니다. 새로운 교과과정이 개발되었고, 이전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던 사회주의식 사고내용을 제거하였으며, 교사들은 새로운 교과내용의 전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인교육분야의 양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40여년에 걸친 분단과 상이한 사회체제에서의 삶 이후에 독일인으로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내려는 세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인교육에 있어서는 동독 주민들의 특별한 욕구에 더욱 잘 부합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그러한 아이디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간이나 시설 및 인력에 대한 투자수요는 매우 높았던 반면에 통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해결과제들이 산적해 있었던 관계로 교육방안들을 위한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교육 및 재교육 실시주체들의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재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경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쟁이 교육의 질에 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장정치인 지방정치는 주민들이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지만, 많은 신연방주들(구 동독지역)의 경우에는 지방행정부나 지방의회가 구조가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민참여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통일이 된지 20년째가 되는 현재에도 신연방주들의 민주시민교육부문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에 모든 정치적 영역에서 매우 많은 자문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경제정책분야 자문을 들어 보겠습니다. 통일 직후에는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민영화와 같은, 실질적인 분야로 많은 연구역량이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연방은행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화폐통합사례는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고려가 종종 충돌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동시에, 가능한 대안에 관한 폭넓은 사전논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제한적으로 열려 있었던 기획의 창을 감안하면 신속한 통일을 추진해야 했으며, 시간이 매우 촉박했던 까닭입니다. 이후 장기적인 경제정책자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할레 경제연구소 설립하였습니다. 할레 경제연구소는 신연방주 지역의 경제학 개선을 목적으로 1991 년에 활동했던 경제심의회가 경험적 연구방식을 바탕으로 한 응용경제연구소의 필요성을 깨닫고 난 후 건의를 함으로써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경제심의회는 구 동독 학술원 산하의 ‘중앙경제연구소’를 해체하고 신연방주 내에 경제연구소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음에는 베를린에 연구소를 설립하였다가 1994 년에 작센 안할트 주의 할레 시로 연구소를 이전하였습니다.

VI.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통일자문 - 한국을 위한 교훈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일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남한에 존재하고 있던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신조인 반공이나 분단이라는 상황이 갑자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시민사회가 급성장을 보이며 새로운 정치적 목표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한때 절대적 의미를 가졌던 통일이라는 주제를 넘어 많은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변화는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선전수단을 통해 지구상의 어떤 다른 국가들보다도 완벽한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 냈으며,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경험하게 될 현실세계는 그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통독후 동독으로 이관된 서독의 체계가 언제나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험의 이전은 항상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을 위한 교훈을 독일의 경험에서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도움이 될 만한 몇몇 기본원칙들을 열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창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신뢰없이 새로운 체제 하에서 정치적인 협조를 얻는 것은 단지 새로운 체제에 따른 반사이익의 수혜자들에 국한될 뿐입니다.
- 기본신뢰는 국민들의 참여가능성, 오직 하나의 방법만이 옳았던 사회주의체제와는 다른 민주주의의 다원성 등과 같은 민주국가의 기능에 관한 기본지식이 있는 경우에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은 남한주민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통일이 북한주민들의 방향성과 안보관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남한 사람들이 분명한 민주주의이념을 견지한 상태에서 북한주민들의 개별적인 인생역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관대하고 열린 태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거만하고 우월감에 젖은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사람들은 통일에 반하는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 민주주의는 모범사례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모범사례는 북한의 지도자 숭배와 같은 비현실적인 선전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통일을 앞두고 남한의 정치 및 사회문화가 투명하고 민주적일수록 훌륭한 대안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북한에 정착시키는 작업이 수월해 질 것입니다.
- 민주시민교육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독일통일과 함께 찾아온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노년세대들이 적응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단되었던 양 지역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한국의 통일환경에 관한 구상이 분명하지 않은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청사진”도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민주시민교육의 요건에 관해 숙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 년 동안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 - 한 편으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통해 북한정권이 강력한 군사적 위협행동을 보인 사실과 다른 한 편으로 탈북 이주민들의 많이 증가한 점, 화폐개혁의 실패, 김 정일의 건강악화 등 - 은 변화의 시작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동독 사람들이 서독 대사관으로 몰려들면서 변화를 이끌어 냈던 움직임이 처음에는 감지하기도 어려운 소규모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도 그러하리라고 이 자리에서 단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한반도의 상황을 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신속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노정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저희 독일사람들은 통일정책에 있어서 ‘자유, 평화 통일’을 언제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목표가 연구소의 이름에 들어있는 것과 같이 평화와 자유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